

社會的 消費와 過剩成長

姜 斗 龍*

논문 초록 :

본고는 과시적 소비와 같이 소비효용의 사회적 상호의존성이 작용하는 이른바 사회적 소비의 존재를 도입할 때, 그것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후생경제학적 측면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본고에서는 사회적 소비가 존재할 때, 개별경제주체의 극대화로부터 도출되는 자원배분은 과잉소비 및 과잉노동을 낳으며, 특히 최근의 내생적 성장이론이 전제하는 대로 자본의 한계생산이 0이 아닌 陽의 값에 수렴할 경우는 장기적으로 과잉성장을 초래함을 보인다. 즉, 사회적 비최적상태를 낳는다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 소비가 존재할 경우, 성장이나 노동시간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억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결과는, 현실경제의 성장에 대하여, 일부 내생적 성장이론이 제시하는 경쟁균형의 과소성장 논리와는 정반대의 평가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흥미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핵심주제어: 과시적, 소비, 외부성, 과잉성장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O0

I. 序 論

모든 이론은 현실의 단순화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현실의 어떤 부분은 종종 이론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되기도 한다. 물론 그러한 가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가정의 있고 없음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와 관련하여 그다지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 국한된다.

표준적인 신고전파 경제학은 소비효용의 상호의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즉, 개별경제주체가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러

*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나 현실의 소비행위를 생각해 볼 때 소비효용의 상호의존 가능성 내지 소위 사회성을 갖는 소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일찍이 베블런(T. Veblen)이 거론한 과시적 소비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가정이 통용되어 온 것은, 그러한 소비의 존재가 그것을 무시할 때에 비해 경제적으로 그다지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가 암묵적으로나마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바로 이 같은 전제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검토한다. 즉, 효용의 사회적 상호의존성을 갖는 소비를 사회적 소비라 정의하고, 이 사회적 소비의 존재가능성을 도입할 때 그것이 장기적인 경제성장 특히 성장의 후생경제학적 측면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차이를 가져옴을 보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본고에서는 사회적 소비의 존재를 도입할 때 개별 경제주체의 극대화로부터 도출되는 자원배분은 과잉소비, 과잉노동을 초래하며 더욱이 내생적 성장이론의 논거에 입각할 경우 장기적으로 과잉성장을 초래함을 보인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비최적상태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사회적 소비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사회적 최적을 위해서는 성장이나 노동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억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¹⁾ 이 같은 결과는, 특히 현대 산업사회가 빚어 내고 있는 물질적 팽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 비추어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II. 社會的 消費

소비행위는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요로부터 출발한다. 생존을 위한 음식의 소비, 추위를 피하기 위한 의복과 주거의 소비가 그 예이다. 이 같은 소비로부터 얻어지는 효용은 주로 생물학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소비에는 소위 효용의 사회성 내지 상호의존성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는 희박하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과 소비가 증가하면 이 같은 생존을 위한 소비의 비중은 점차 축소된다. 잘 알려진 앵겔의 법칙이 좋은 예이다.

1) 본고의 논리는 환경문제나 환경효용의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게 도출되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비가 생존을 위한 단계를 넘어서면 그 이후 단계의 소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의 효용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편의 내지 안락함의 효용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과시의 효용이라 할 수 있다. 후자는 베블런의 과시적 소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베블런이 지적한 것과 같은 적극적인 의미(단어 그대로의 의미)에서의 과시를 위한 소비뿐 아니라 소극적인 측면, 즉 같은 신분 내지 소득집단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또는 앎음을 보이기 위한) 소비²⁾도 포함한다. 이는 바로 소비효용의 사회적 상호의존성이 적용되는 분야이다.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수록 이 두 측면의 소비의 비중은 커질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있어 이 같은 넓은 의미의 과시적 소비의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³⁾

주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제기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소비행위의 본질은 사회성을 갖는 소비에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장 보드리야르(J. Baudrillard, 1986)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현대사회에서의 소비의 핵심은 더 이상 사용가치를 위한 소비가 아니며, 신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象徵으로서의 측면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즉, 현대사회에서의 소비는 적극적인 의미에서든 소극적인 의미에서든 주로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나타내기 위한 행위로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반드시 이 같은 주장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적어도 사회적 소비가 존재하고 그것이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 실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소비행태를 되돌아켜 봄으로써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행동이나 의식이 소위 사회화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각 개인의 선호 역시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되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 전체의 소비수준 상승에 따라 개인의 선호도 변화하여 간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경제이론의 현실적합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사회적 소비의 존재가능성을 도입하고 그 경제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일단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2) 유행도 그 한 예이다.

3) 사실 베블런의 시대에 그가 말한 과시적 소비는 일부 유한계급에만 존재하는 현상이었지만 현대에 있어 본고에서 논하는 광의의 과시적 소비는 거의 모든 소비자에 존재하는 현상이라 보여진다.

기존의 연구 중 사회적 소비를 도입한 경우의 거시경제적 함의를 다룬 논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며, 필자가 아는 바로는 오오타키(大瀧雅之, 1997) 정도이다. 오오타키 역시 사회적 소비도입시의 성장과 관련된 후생경제학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 모형이나 구체적인 논리는 본고와 크게 다르다. 우선 오오타키는 본고와 달리 여가효용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가효용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때에는 과잉소비나 과잉노동의 현상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여가효용을 빠뜨리는 것은 사회적 소비의 후생적 함의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오오타키는 사회가 소비선도계층과 추종계층으로 구성된다는 가정하에 이들 두 계층의 소비관계를 통해 후생적 함의를 이끌어 내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 같은 가정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본고의 모형은 오오타키(1997)에 비해 더 단순한 모형을 통해 보다 일반성이 높고 풍부한 함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제 이하에서는 사회적 소비의 존재를 도입한 모형을 제시하고 그 경제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즉, 소비로부터의 효용은 사용가치 효용과 아울러 과시적 소비에서 기인하는 효용도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전자는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소비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호의존성을 갖지 않는 반면, 후자는 사회 전체의 소비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III. 模 型

1. 효용극대화

개별경제주체는 경제활동에 있어 소비와 아울러 여가로부터 효용을 얻는다고 가정한다. 이제 사회적 소비의 존재를 도입하여 소비 및 여가로부터 얻는 개별경제주체의 효용함수를 흔히 사용되는 대체탄력성 불변의 효용함수의 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정한다.⁴⁾

$$U = \frac{1}{1-\sigma} (c^{\phi} Z^{1-\phi} L^{\eta})^{1-\sigma} - 1. \quad (1)$$

4) 이 효용함수의 형태는 Elbasha and Roe(1996)에서의 효용함수를 수정·차용한 것이다. 이는 함수형태와 매개변수의 조건들로부터 ① c , Z , L 에 대해 증가함수이자 strictly concave 함수이고, ② Inada조건을 충족한다. 또한 이 효용함수에서는 c 와 Z 의 지수의 합이 1이 되도록 가정하였으나 이것은 이하의 결론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c 와 Z 의 지수의 합이 1보다 크거나 작더라도 이하의 논리에는 변함이 없다.

$$Z \equiv c/C, 0 < \sigma < 1, 0 < \phi < 1, \mu \geq 0, \phi(1-\sigma) < 1, \mu(1-\sigma) < 1$$

c : 개별경제주체의 소비, C : 사회 전체의 소비수준, L : 여가

c 로부터 얻는 효용은 통상적인 사용가치로부터의 소비효용이고, Z 에 의한 효용은 과시적 소비로부터의 효용에 해당한다. 과시적 소비로부터의 효용은 그 경제주체의 소비수준을 사회 전체의 소비수준으로 나눈 값(c/C)의 함수이다. 사회 전체의 소비수준(C)은 개별경제주체가 통제할 수 없는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값이다.

경제주체(representative consumer)는 소비 및 여가로부터 얻는 총효용을 극대화하도록, 즉 아래 식 (2)와 같은 동태적 극대화를 통해 노동과 여가의 선택, 저축과 소비의 선택을 행한다.⁵⁾

$$\begin{aligned} \text{Max}_{c, L} \int_0^{\infty} U(c, Z, L) e^{-\rho t} dt \\ \text{s.t. } \dot{K} = F(K, L) - c \end{aligned} \quad (2)$$

K : 자본스톡, F : 생산함수 ($F_K > 0$, $F_L < 0$, $F_{LL} > 0$, $F_{KL} (\equiv \frac{\partial F_K}{\partial L}) < 0$ (C 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1인당 개념))

위 극대화에 대한 경상치 해밀토니안은 다음과 같다.

$$H = U(c, Z, L) + \lambda \{ F(K, L) - c \}. \quad (3)$$

이로부터 유도되는 극대화의 일계조건은

$$U_c = \lambda, \quad (4)$$

$$U_L = -\lambda F_L, \quad (5)$$

$$\dot{\lambda} = -\lambda F_K + \lambda \rho \quad (6)$$

5) 여기서의 L 은 생산함수의 통상적인 표기에서 사용되는 노동이 아니라 그 반대개념인 여가라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생산함수 F 의 L 에 대한 관계도 노동에 대한 관계와는 모두 부호가 반대이다.

이다.

식 (4)와 식 (5)로부터

$$U_L = -U_c \cdot F_L. \quad (7)$$

즉, 극대화의 해는 항상 식 (7)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식 (7)의 경제적 의미는 여가 한 단위를 증가시킴으로써 얻는 효용은 그에 따른 생산감소와 소비의 한계효용의 곱의 절대치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쉽게 말하면 극대화의 해에서는 여가증가로부터 얻는 효용의 크기와 소비감소로부터 잃는 효용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소비, 노동(여가)의 최적성 문제

먼저 개별경제주체가 각각 독립적인 극대화를 통해 소비, 여가수준을 결정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개별적 극대화의 경우 사회 전체의 소비 C 는 개별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로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므로 소비의 한계효용은

$$U_c|_{\text{given } C} = (Z^{1-\phi} L^\mu)^{1-\sigma} c^{\phi-\phi\sigma-1} \quad (8)$$

이 된다.

L^* , c^* 가 개별적 극대화의 한 해라고 가정하면 L^* , c^* 는 다음 식을 충족한다.

$$U_L(L^*) = -U_c(c^*)|_{\text{given } C} \cdot F_L(L^*). \quad (9)$$

한편, 사회적 최적화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를 위해 자비로운 사회적 계획자가 존재하여 그가 사회 전체의 총효용이 극대화되도록 각 경제주체의 소비, 여가수준을 결정해 주는 경우를 상상해 보기로 한다. 이 경우 계획자는 C 를 결정하며 개별경제주체의 c 는 그에 따라 비례적으로 결정된다(계획자는 분배구조는 건드리지 않는다). 즉, 이 경우에는 개별적 극대화와 달리 C 가 아닌 Z 가 주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경우 개별경제주체가 느끼는 소비의 한계효용은

$$U_c|_{\text{given } Z} = (C^{\phi-1} L^\mu)^{1-\sigma} c^{-\sigma} = \phi (Z^{1-\phi} L^\mu)^{1-\sigma} c^{\phi-\phi\sigma-1} \quad (10)$$

이 된다.

$0 < \phi < 1$ 이므로 식 (8)과 식 (10)으로부터

$$U_c|_{\text{given } C} > U_c|_{\text{given } Z} \quad (11)$$

이다.

따라서, 식 (9), 식 (11)과 $F_L < 0$ 으로부터, 개별적 극대화의 해 L^* , c^* 에서

$$U_L(L^*) > -U_c(c^*)|_{\text{given } Z} \cdot F_L(L^*) \quad (12)$$

의 관계가 성립한다. 즉, L^* , c^* 는 사회적 최적은 아니다.

U_{LL} , $U_{cc} < 0$ 이므로 사회적 계획자는 L^* , c^* 보다 여가를 늘리고 소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사회적 총효용을 늘릴 수 있다. 즉, 개별극대화의 해를 $L^*(i)$, $c^*(i)$, 사회적 극대화의 해를 $L^*(s)$, $c^*(s)$ 로 다시 표기할 때, 일반적으로

$$L^*(s) > L^*(i), \quad (13)$$

$$c^*(s) < c^*(i) \quad (14)$$

의 관계가 성립한다. 한마디로 개별극대화의 해는 과잉소비, 과잉노동(과소여가)인 것이다.

3. 성장의 문제

다음으로 성장의 문제를 살펴보자.

먼저 개별경제주체의 극대화의 경우 식 (4)와 식 (8)로부터

$$(Z^{1-\phi} L^\mu)^{1-\sigma} c^{\phi-\phi\sigma-1} = \lambda \quad (15)$$

를 도출한 후 식의 양변에 자연대수를 취하여 시간에 대해 미분한 뒤 식 (6)에 대입하면,

$$\frac{\dot{c}}{c} = (1 + \phi\sigma - \phi)^{-1} \left\{ F_k - \rho + (1 - \sigma)(1 - \phi) \frac{\dot{Z}}{Z} + (1 - \sigma)\mu \frac{\dot{L}}{L} \right\} \quad (16)$$

이 된다. 사회적 극대화의 경우에는 식 (4)와 식 (10)으로부터

$$\phi(Z^{1-\phi} L^\mu)^{1-\sigma} c^{\phi-\phi\sigma-1} = \lambda \quad (17)$$

를 도출한 후 마찬가지로 양변에 자연대수를 취하여 시간에 대해 미분한 뒤 식 (6)에 대입하면 식 (16)과 동일한 식을 얻을 수 있다.

즉, 식 (16) 자체는 개별 극대화의 경우나 사회적 극대화 경우나 동일하다. 그러나 물론 두 경우에 있어 F_k 나 $\frac{\dot{L}}{L}$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경우의 성장률이 같은 것은 아니다.

이제 여기서는 균제성장(steady state growth)과 같은 장기성장에 국한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리가 고려하는 모형의 경우 엄밀한 의미의 균제성장

이 가능한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의 장기적인 성장률이란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다음을 상정할 수 있다.

우선 L 의 경우 명백한 물리적 제약이 존재하므로 추세적인 상승 또는 하락을 지속할 수는 없다. 즉, 궁극적으로 $\frac{L}{L}$ 은 0에 수렴하거나 혹은 0 주위에서 진동(oscillate)하거나 둘 중 하나이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도 진동의 한 주기를 단위로 본다면 결국 $\frac{L}{L} = 0$ 이다. 따라서 장기성장률로서는 $\frac{L}{L} = 0$ 이라 간주할 수 있다. 또 우리가 한 사회의 성장률을 고려한다면 $\frac{Z}{Z} = 0$ (소득분배의 불변)이라 상정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의 한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률을 고려하는 경우, $\frac{Z}{Z} = 0$, $\frac{L}{L} = 0$ 으로 상정할 수 있다. 즉, 그 경우의 장기성장률은

$$\frac{\dot{C}}{C} = (1 - \phi\sigma - \phi)^{-1} \{F_K - \rho\} \quad (18)$$

로 된다.

식 (18) 역시 개별극대화나 사회적 극대화나 동일하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듯이 개별극대화나 사회적 극대화의 경우 L 의 크기가 서로 다르므로 두 경우의 F_K 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본축적과 더불어 F_K 가 궁극적으로 0에 수렴하는 신고전과 성장이론에 따를 경우는 양자의 성장률은 궁극적으로 같게 된다. 그러나 F_K 가 0에 수렴하지 않고 陽의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는 최근의 내생적 성장이론의 논거에 따를 경우는 양자의 성장률은 달라진다. 여기서는 모형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후자의 경우(내생적 성장론의 논거)를 따르기로 하자. 즉,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text{가정 1) } \lim_{K \rightarrow \infty} F_K(K) \big|_{w=1} = a, \quad a > 0^6 \quad (W: \text{노동투입량})^7,$$

가정 1)과 같이 자본의 한계생산성의 극한치가 0보다 큰 값을 갖는 경우는, 1

6) 신고전과 성장모형과 내생적 성장모형의 수학적 차이이는 이 a 가 0인가 陽의 값인가로归结된다(Jones and Manuelli(1990) 참조).

7) 내생적 성장이론의 논거에 따르면, 이 경우 K 를, 인적 자본(human capital)과 비인적 자본을 총괄한 總자본(total capital)의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인당 노동투입량의 차이가 존재하면 1인당 자본의 한계생산성의 극한치도 달라진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 개별극대화와 사회적 극대화의 경우 1인당 노동투입의 크기가 서로 다르므로 1인당 자본의 한계생산성도 궁극적으로 서로 다르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 (18)에서 사회적 극대화 경우의 F_K 를 $F_K(s)$, 개별 극대화 경우의 F_K 를 $F_K(i)$ 라 할 때, 식 (13)의 $L^*(s) > L^*(i)$ 와 식 (2)의 $F_{KL}(= \frac{\partial F_K}{\partial L}) < 0^8$ 및 가정 1)로부터

$$F_K(i) > F_K(s) \quad (19)$$

로 된다.⁹⁾

혼동을 막기 위해 개별적 극대화 경우의 소비성장율을 $\frac{\dot{C}}{C}(i)$, 사회적 극대화 경우의 소비성장율을 $\frac{\dot{C}}{C}(s)$ 라 표기하면, 이제 식 (1)에서의 $0 < \sigma < 1$, $0 < \phi$

8) $F_{KL}(= \frac{\partial F_K}{\partial L}) < 0$ 는 신고전과 성장모형이든 내생적 성장모형이든 관계없이 모두 성립한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신고전과 성장모형과 내생적 성장모형의 합수적 차이는 축적가능한(재생산가능한) 생산요소에 대해 수확체감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귀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내생적 성장모형함수로서 $Y = AKW^b$ (Y, W 는 각각 산출량과 노동투입, $0 < b < 1$)를 고려할 때 $\frac{\partial Y_K}{\partial W} > 0$ 이고, 노동투입 W 와 여가 L 은 반대방향으로 변화하므로 $Y_{KL}(= \frac{\partial Y_K}{\partial L}) < 0$ 로 된다.

9) 오해를 피하기 위해 1인당 자본의 한계생산성 F_K 와 가정 1)에서의 노동투입=1인 경우의 자본의 한계생산성 $F_K|_{w=1}$ 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는 자본의 한계생산의 극한치를 이야기할 때 양자의 개념은 혼용된다. 그러나 본고의 경우는 1인당 노동투입량이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를 혼용해서는 안 된다. $F_K|_{w=1}$ 의 극한치는 동일한 생산함수하에서는, 사회적 소비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또한 만일 사회적 소비가 존재한다면 개별극대화나 사회적 극대화나 무관하게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 값은 여기서는 가정 1)에 의해 a 이다. 그러나 1인당 자본의 한계생산성(F_K)은, 위 각각의 경우(개별극대화와 사회적 극대화)에 있어 1인당 노동투입량이 다르고 식 (2)에서 보듯 노동투입량이 변화하면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변화하므로 그 극한치도 서로 달라진다. 다만 이 같은 차이는 $a > 0$ 인 경우에만 성립하며, $a = 0$ 인 경우(Solow 성장함수의 경우)는 F_K 의 극한치도 모두 0으로 수렴하므로 차이가 소멸된다. 즉, $a = 0$ 의 경우는 이하에서 제시하는 과잉성장의 논리는 steady state에 이르기 전까지의 이행과정(transitional period)에서만 성립한다. 물론 $a > 0$ 의 경우는 steady state growth하에서도 성립한다.

<1과 식 (18)과 식 (19)로부터 장기성장률은

$$\frac{\dot{c}}{c}(i) > \frac{\dot{c}}{c}(s) \quad (20)$$

의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즉, 개별극대화로부터 얻어지는 장기성장률은 사회적 최적의 장기성장률을 초과한다. 다시 말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과잉성장이 되는 것이다.

IV. 經濟的 意味과 示唆點

위에서 우리는 간단한 모형을 통해 소비에 사회성을 갖는 부분이 존재할 때 시장에서 결정되는 자원배분은 사회적 최적에서 이탈함을 보였다. 즉, 과잉소비, 과잉노동 그리고 과잉성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위 모형이 제시하는 이 같은 결과는 상식에 비추어 본다면 반드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우리는 사회적 소비로 인해 후생의 손실을 경험하는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것으로 소위 私敎育과 관련된 소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사교육과 관련된 소비는 소비의 경합성(emulation) 내지 사회성이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예이다. 즉, 사교육관련 소비의 대부분은 교육으로부터의 효용 그 자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남들이 모두 하므로 남들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소비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계에 있어 사교육은 커다란 경제적 부담이 되고 그 때문에 가계는 소득확보를 위해 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 전체적으로 사교육 소비를 줄인다면 지금보다 생활의 여유가 한층 나아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개별 가계는 교육경쟁에 대한 가치부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독자적으로 사교육소비를 줄이는 행동은 할 수는 없다. 즉, 이 문제는 사회 전체적인 사교육 소비의 억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예는 우리의 일상소비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실적으로 이 같은 측면에서의 사회적 최적으로부터의 괴리에 따

른 후생손실은 상당한 크기가 될 것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우리는 위에서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개인의 효용의 대상으로 소비와 여가만을 고려하였지만 현실적으로 그와 아울러 환경으로부터의 효용도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효용은 그 성격상 여가와 비슷한 측면을 갖는다. 즉, 그것은 소비 내지 생산(노동)과 경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환경효용을 고려한다면 개별적 극대화의 사회적 최적에 비한 후생손실은 훨씬 커질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개별적 극대화의 비최적성 문제가 갖는 심각성은 한층 커지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사실로부터 얻어지는 정책적 함의는 간명하다. 사회적 소비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 사회적 최적을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자원배분보다 여가를 늘리고 소비(생산)활동을 억제하도록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가? 우선 정부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자. 여가를 늘리고 노동(또는 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정책으로는 우선 개별 경제주체가 여가로부터 보다 많은 효용을 얻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여가·노동선택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있다. 예컨대, 여가활동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환경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정책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은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소비의 경합성 내지 과시적 소비의 개념을 보다 넓혀 富의 경합성 내지 과시적 富라는 측면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개인 간 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도 상당 정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실제로 최근 소위 글로벌 경제화 추세를 타고 벌어지는 국가 간의 치열한 경제적 경쟁은 단지 경제적 풍요가 사회의 후생을 증대시켜 준다는 측면(사용가치에 해당하는 측면)을 넘어 일종의 국가차원에서의 과시적 효용의 발로인 측면(국력의 과시적 효용에 해당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보여진다. 이 같은 경우 본고의 논리에 따르면 정부는 오히려 사회적 최적으로부터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그 격차를 벌리는 행동을 취할 유인을 가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볼 때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은 정부정책과 아울러 그에 대한 감시기능으로서 민간차원에서의 시민운동이나 각 개인의 각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환경문제와 관련된 시민운동이나 노동시간 감축을 위한 노동운동 등이 갖는 기능이 이러한 측면에서 새롭게 평가될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 경제적 측면에서는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소비행위(경제행위)의 본래적 의미를 돌이키고 단순한 생활의 가치를 발견해 가려는 사회적 운동이나 각 개인들의 각성도 이 같은 관점에서는 최적상태로부터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근본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¹⁰⁾

V. 結 論

본고에서는 소비행위 중 그로부터 얻는 효용이 사회구성원들 간에 서로 독립적이지 아닌 부분, 즉 이른바 사회적 소비가 존재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은 사회적 최적에 비해 과잉소비, 과잉노동, 그리고 과잉성장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였다.

사회적 소비는 한 경제주체의 소비행위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란 점에서 소비에 外部性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고에서 살펴본 측면은 논리구조상으로는 외부성이 존재할 때 경쟁균형이 비최적이 될 수 있는 경우의 한 예에 다름아니다.

이는 형식논리 그 자체로는 크게 새로울 바가 없는 것이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갖는 시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목할 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소비의 외부성에 의한 비최적의 문제는 특정 생산부문에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와는 비교될 수 없는 중요성을 갖는다고 여겨진다. 소비의 외부성은 경제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선택, 즉 노동과 여가의 선택, 소비와 저축의 선택에서 비최적성을 낳는다. 일부 논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적 소비가 현대산업사회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라 간주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에 의한 과잉성장·과잉소비의 문제는 현대자본주의에 있어 상당한 보편성을 갖는 과제일 수도 있다.

아울러 이 문제는 성장과 후생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성찰을 요구한다. 경제성장이 초래하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보통 환경문제와 관련하

10) 에컨대, 소로우(H. D. Thoreau)의 『월든(Walden)』이 좋은 보기가 될 것이다. 19세기에 씌어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 제1장 숲의 경제학에서 그는 이미 산업사회적 생활양식의 과잉소비, 과잉노동문제를 매우 흥미 있는 방식으로 제기하고 있다.

여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성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문제에 외부성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즉 우리가 성장의 환경코스트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고 이를 環境稅 등의 형태로 시장기구에 반영시킬 수만 있다면 성장은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고의 논리는 만일 사회적 소비가 존재하고 자본의 한계생산이 0으로 체감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환경코스트를 완전히 내부화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과잉성장의 문제가 남게 됨을 보여 준다.

또한 이 같은 본고의 논리는 현실경제의 성장에 대하여 생산함수에서의 외부성의 존재를 강조하는 Romer (1986) 등의 이론에서 도출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평가 내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는 점도 흥미 있다. 지식의 외부성에 기초한 Romer (1986)의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시장에서의 성장은 과소성장이 되며, 사회적 후생극대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성장을 높이는 정책을 취할 것이 요구된다. 최근 각국이 장기성장능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성장우호적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도 이러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본고의 논리는 현실의 성장이 이 같은 평가 및 정책과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도 있음을 제기한다. 현재의 세계경제에서 적어도 중간 정도 이상의 소득 수준에 있는 국가들, 즉 생존수준의 소비단계는 이미 훨씬 넘어버린 국가들에 있어서는, 본고의 과잉성장논리에 의한 여가효용(및 환경효용)의 손실분이 로머적인 과소성장에 의한 소비효용의 손실분보다 오히려 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물론 실제로는 효용손실의 정량적 추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경제의 소비나 성장수준의 과잉 내지 과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본고에서 살펴본 측면은 경제활동과 후생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지배적인 인식이나 행동에 보다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문제제기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이 문제는 소위 글로벌경쟁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름 아래 각국이 경쟁적으로 경제적 팽창에 매진하는 현상황에 이르러서는 그 현실적 시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大瀧雅之, “內生的な選好と經濟成長: Veblen의 內生成長モデル,” 國民經濟雜誌, Vol. 175, No. 1, 1997, pp. 21-34.
2. Barro, R. and X. Sala-i-Martin, *Economic Growth*, McGraw-Hill, 1995.
3. Baudrillard, J., *La Societe de Consommation: ses Mythes ses Structures*, 1986(이상률 역, 『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1).
4. Chiang, A., *Elements of Dynamic Optimization*, McGraw-Hill, 1984.
5. Elbasha, E. and T. Roe, “On Endogenous Growth: The Implications of Environmental Externalities,”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Vol. 31, 1996, pp. 240-268.
6. Jones, L. and R. Manuelli, “A Convex Model of Equilibrium Growth: Theory and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 1990, pp. 1008-1038.
7. Romer, P.,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4, No. 5, 1986, pp. 1002-1037
8. Thoreau, H. D., *Walden*, 1854(강승영 역, 『월든』, 도서출판 이레, 1993).
9. Veblen, T., *The Theory of Leisure Class*, Transaction Publishers, 1899.